

영암군 신북 오리농장 이어 나주에서도 고병원성 확인

‘공포의 AI’ 호남 전역 강타

전남 2건·전북 18건 총 20건 확산 감염 닭 650마리 화순군 식당 공급

영암군 신북면 오리농장에 이어 나주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호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나주시 반남면과 기존 AI 발생 지역인 전북 김제, 정읍(고부, 영원) 등의 5개 농가와 식당에서 ‘H5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 지역에서 AI로 판정된 곳은 영암과 나주 등 2건, 전북은 18건 등 총 20건으로 늘어 AI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의 AI 감염 우려가 있는 오리 농장 지역 음식점 등에 불법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AI 방역 대책과 시스템이 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 반남면 오리농장 AI 발생 =영암 신북면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나주 반남면 오리농장에서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전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현재 전남·북에서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사례는 모두 32건이며, 이 가운데 AI로 판정된 것은 1차 김제(3일 판정), 2차 정읍 영원(7일), 3차 정읍 고부(8일), 4차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영암(12일), 김제 5곳(13일), 나주·김제·정읍 등 5곳(14일)까지 모두 20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AI로 확인된 나주 반남면 농장은 지난 10일 오리 600마리가 집단폐사함에 따라 정밀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11일 위험지역(500m) 내의 2만 마리를 살처분한 곳이다.

나주 반남면 농장은 가장 먼저 AI가 발생한 영암 신북면 농장과 500m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이미 영암 신북 농장 3km 이내의 모든 닭·오리가 살처분된 상태다.
하지만 반남면과 같은 날 집단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에 들어간 나주 산포면 오리 농장은 반남면과 약 20km 떨어져 있는 곳여서 추가로 고병원성 AI로 판정될 경우 발생지로부터 반경 10km 약 40개 농장 100여 만마리(추정)의 살처분은 물론 전남 전역에 걸쳐 닭·오리에 대한 차단 방역과 살처분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전북 AI의심 오리 전남으로 유동 =14일 전남도와 화순군 등에 따르면 이번 제한조치가 취해진 지난 7일께 AI 발생 지역인 전북 고부에서 모 유통업자를 통해 닭 650마리가 화순군 등의 식당 및 유통업체에 공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긴급 조사에 나섰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이날 오후 화순군 해당 업체를 방문해 닭 20마리에 대해 채혈검사를 한 데 이어 정밀조사를 위해 생닭 3마리를 수거하는 한편, 화순군은 이 농장 일대에 이동 제한조치를 취했다.
또한 이들 닭 가운데 일부가 순천, 보성 등의 업체에도 유통됐을 가능성마저 제기돼 방역당국이 사실 확인중이며, 만약 이 같이 유통된 닭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18일 개막
오는 18일 개막하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 엑스포’를 앞두고 14일 함평군 함평읍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곤충 모형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는 ‘미래를 만드는 작은 세계’라는 주제로 6월 1일까지 45일간 개최된다.
<관련기사 2면> /위지량기자 jrvi@kwangju.co.kr

정부 ‘균특예산’ 삭감 지역 현안 사업 차질

광산업·남해안 관광벨트 등 타격

지난해말 참여정부가 확정된 ‘200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를 현 정부가 1% 삭감하고 나선 데 이어 내년에는 대폭 줄일 가능성이 커 광주·전남도의 현안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균특회계를 축소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최약인 광주·전남지역의 낙후를 부채질할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의지도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전국 지자체에 지원될 균특회계 예산 7조6천억원의 1%에 달하는 728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균특회계 예산결산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주요 예산 삭감사업은 7개 지방도로 건설 예산 122억원을 비롯해 생활체육공원 조성(24억원), 남해안 관광벨트개발(20억원), 지역 전략산업 진흥연구개발(200억원) 등이다.

시는 올해 모두 30개 사업에 690억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를 시발로 내년 예산에 삭감되는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 있다.
따라서 균특회계 지역 전략산업 진흥연구개발 부문에 광주시의 3대 전략산업인 광산업, 전자, 자동차 사업이 포함돼 있어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내년 3단계 사업을 추진을 위해 모두 1천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미 지식경제부가 균특회계 삭감 차원에서 예산을 1천억원대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시·군을 포함한 전남도내 올 총 균특예산 사업은 710건, 5천110억원에 이른다. 균특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당장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중 역사·문화와 관련된 사업 예산이 20억원 삭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계산 불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 = 참여정부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핵심정책으로 도입한 예산이다. 부처별로 나눠 있던 지방 지원 예산을 하나로 묶어 편성했다. 지난 2005년 5조5천억원에서 올해 7조6천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됐으며, 지역전략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 지원에 쓰이고 있다.

테마관광지(8억1천만원) 조성사업, 압도 청해진 역사공원 조성 및 성역화(15억원) 등 2개 사업은 예산 일부가 삭감될 전망이어서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균특회계 삭감 방침에 따라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李 대통령 미·일 순방 출국 전통적 동맹관계 복원 초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이하 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 도착, ‘차세대 한·미 동포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1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곧바로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20일 일본에 도착, 다음날인 21일 후쿠다 아소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한 뒤 귀국한다.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이 이 대통령의 방문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미·한 간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미국 경제인 주요인사 초청 오찬, 한국 투자설명회, 미 상공회의소 및 한미재계회의 공동 주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결과 보고, 일본 경단련 주최 오찬 등 경제 협력 강화에도 주력하게 된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사태 해결 및 대북정책 공조 방안, 주한 미군 문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의 의제

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면담에 이어 상·하원 지도부, 체니 부통령, 콘돌리자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잇따라 만나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북핵사태 공조 방안과 한일 정상간 서훈외교복원, 부품·소재 분야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를 비롯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키히토 일왕 내외 면담, 일본 TBS 주최의 ‘일본 국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이해 증진에도 적극 나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